

+ 입법정보

계간 세종 의정

| 겨울호 |

2025년
통권 제46호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세종시민의 사랑 덕분에
제4대 후반기 의회가 함께 끌려왔습니다.



의회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시민 중심의정으로
세종의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합니다.

제103회 임시회



1월 28일 ~ 2월 6일(10일)



의회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운영 미디어 채널



누리집
<https://council.sejong.g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ouncilsej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세종특별자치시의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jongcitycouncil>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ejongcouncil>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입니다.

길었던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친지와 함께 등근 보름달을 보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던 마음 그대로,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꿈과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때입니다.

10월 9일부터 열린 세종한글축제는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의 참여 속에 말 그대로 ‘모두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한글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한 우리 시의 위상을 잘 보여준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오랜 기간 정성을 다해 꼼꼼히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큰 과제들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가상징구역 기본계획 공모가 시작되었고, 설명회에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실질적 첫 발을 힘 있게 내디딘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5극 3특’ 국가전략의 설계도가 확정되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균형성장의 비전을 구체화할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계획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습니다. 특정 현안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깊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세종보 문제는 절차와 공론 과정의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조사, 모니터링 결과와 경제성 분석에 근거해 2019년 이미 해체가 결정된 것을 정권이 바뀐 후 감사원이 나서 해당 사안을 지적 후 불과 보름 만에 결정을 뒤집었다는 것을 많은 시민께서 알고 계십니다.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이해로 비칠 수 있는 재가동 요구는 시민社会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찬반의 대립을 부추기기보다, 사실과 원칙 위에서 투명하게 논의하고 합리적 해법을 찾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시정 전반에서도 같은 교훈을 확인합니다.

시청 테니스팀 해체 입장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공론화와 여론 수렴이 충분하지 못해 체육계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이로 인해 논란이 확산되고 체육 정책의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이 첫걸음이어야 하며, 정책은 절차의 정당성 위에서만 힘을 얻습니다. 집행부가 갈등을 키우는 조직이 아니라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12일간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를 시작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다툼을 조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충분한 설명으로 시민과의 신뢰를 더 두텁게 쌓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논의, 원칙을 지키는 결정, 열린 소통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의 길을 착실히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

목차

+ 입법정보

계간 세종 의정

| 겨울호 |

발행일 | 2025년 12월 23일

발행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행인 | 임채성 의장

제작부서 | 홍보기획팀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계간『세종의정』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표지 이야기

소복한 겨울이 잠식한 땅에도 생명의 흔적이 내려 앉는다. 겨울을 가로지르는 빌길음은 지난 계절을 싣고 살아온 시간의 곡선이다. 느리게, 또 빠르게 걸어온 음률이 곡의 마지막을 알리는 피네Fine를 지나친다. 이제 발자국은 새로운 한 해로 걸어간다.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마지막 봄과 여름을 앞두고 있다. 2025년, 계간『세종의정』통권 제46호는 친란한 의정의 끝맺음을 앞두고 지난 성과를 매듭지어본다.



04 개회사

08 의정포커스

10 결의안

12 주요안건 처리현황

16 의회인터뷰



52



59

28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39 5분 자유발언

45 긴급현안질문

46 공부하는 의회

52 의회 성과 노트

56 세종에서 놀자, 쉬자

58 의정주요뉴스

60 입법정보

77 의회 홍보채널 안내

제101회 임시회 폐회… 73건 안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월 13일 제1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같은 달 12일간 회기를 진행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난 9일부터 열린 세종한글축제는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 한글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한 우리 시의 위상을 잘 보여준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랜 기간 정성을 다해 꼼꼼히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국가상징구역 기본계획 공모가 시작되고 5극 3특 국가전략의 설계도가 확정되는 등 균형성장 비전을 구체화할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계획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김효숙·안신일·김영현·이현정·홍나영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충식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단층제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행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향후 세종시 법 개정을 통한 재정 특례 명문화 추진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또한 ‘제10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등 총 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달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73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김충식·여미전·이순열·윤지성·박란희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30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등 32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등 7건이다.

또한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도 의결됐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담배 제조물 결합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임채성 의원 대표발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월 13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합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담배 제조사의 법적·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채성 의원은 담배의 유해성을 언급하며, “담배회사는 타르 및 니코틴 외 유해 성분 정보를 축소 표시하는 등 제품의 위해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을 초래했으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조 3,758 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담배 제조사들은 흡연 피해자 보상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 보전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기업 차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국회가 제정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증진법」, 「제조물책임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금연 환경을 강화하고, 흡연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물의 결합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시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

김광운 의원 대표발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월 24일 열린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캄보디아 일대에서 발생한 다수의 한국인 납치·감금 및 착취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 구출과 재외국민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외 치안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의 고용난과 채무 증가 등 사회적 절망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 비극”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범죄 조직 총책으로 불리는 수배자가 대사관을 찾아와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대사

관의 행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재외공관의 근무 태만과 기강 해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구조 및 종합 보호 체계 구축 ▲재외공관의 24시간 긴급 대응체계 확립과 국제공조 수사 강화 ▲해외취업 사기 및 불법 알선 광고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 ▲청년 일자리 안정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즉시 이행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외교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제101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용어 안내 ·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위 · 행정복지위원회: 행복위 · 산업건설위원회: 산건위
· 교육안전위원회: 교안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특위 ·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위

1차 본회의 | 2025. 10. 13. |

항	의안번호	발의(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1	4710	김종식 의원 외 4명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개선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
2	4785	의장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
3	4786	의장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	-
4	4784	임채성 의원 외 7명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5	-	의장	휴회의 건(2025.10.14.~10.23./10일간)	본회의	-

2차 본회의 | 2025. 10. 24. |

항	의안번호	발의(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1	4749	임채성 의원 외 3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	원안가결
2	4750	김영현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	원안가결
3	4751	임채성 의원 외 5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안	운영위	원안가결
4	4711	시장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5	4712	시장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6	4713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7	4714	시장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8	4715	시장	한자어 · 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9	4716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10	4717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11	4718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12	4719	시장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13	4720	시장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항	의안번호	발의(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14	4721	시장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15	4722	시장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16	4724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17	4725	시장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18	4726	시장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19	4727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20	4728	시장	보람, 조치원 수영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21	4729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22	4747	시장	2026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23	4752	김현미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24	4753	김영현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보금자리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25	4754	홍나영 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26	4755	여미진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27	4756	홍나영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28	4757	박란희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29	4758	이순열 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30	4759	김현미 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31	4761	김현미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32	4762	박란희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33	4789	김광운 의원 외 6명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34	4730	시장	2026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35	4731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36	4732	시장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37	4733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38	4734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항	의안번호	발의(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39	4735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0	4736	시장	2026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1	4737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중년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2	4738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사업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3	4739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4	4740	시장	세종고용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5	4741	시장	2026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6	4742	시장	시내버스 정류장 위탁운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7	4743	시장	세종시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8	4744	시장	종량제 물품 판매·관리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9	4745	시장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0	4763	김현옥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1	4764	김재형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2	4765	안신일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3	4766	안신일 의원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	산건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54	4767	안신일 의원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5	4768	김재형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6	4769	김현옥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7	4770	김현옥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8	4771	김효숙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9	4772	김재형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0	4773	안신일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1	4774	안신일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2	4775	유인호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3	4776	김광운 의원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항	의안번호	발의(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64	4777	김재형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5	4778	최원석 의원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6	4746	시장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7	4748	교육감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변경 동의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8	4779	김현미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69	4780	유인호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0	4781	유인호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1	4782	김현옥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2	4783	박란희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3	4787	의장	(재)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소멸’의 고리 끊어야 세종이 발전한다

김학서 의원

지방소멸은 2000년대부터 예고된 범사회적 과제였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중앙으로 모이고, 남은 땅에서는 사람도, 건물도, 문화도 쇠퇴하는 수순을 밟고 있었다. 2012년 세종시의 출범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의 일환이었다. 국가는 지역 소멸을 해결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할 열쇠를 행정수도 완성에 걸었다. 행정수도 완성의 길이 보이는 지금, 세종시에는 또 다른 과제가 생겼다. 바로 읍면의 소멸이다. 김학서 의원은 한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는 ‘지역 내 소멸’에 집중했다. ‘우리 동네’가 아닌 ‘세종’을 바라봐야 한다는, 김학서 의원의 지역 소멸 대안을 만나보자.





| 이번 제4대 의회 의정활동도 막바지를 향해 가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전한다면?

저는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년생 의원이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전문성을 겸비하기 위해 공부도 많이 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들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렇기에 후회는 없다. 매 순간 부단히 노력하고, 아쉬움 없도록 마음을 쏟았다. 제4대 의회 개원 직후부터 지금까지,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든 시간을 헤쳐나온 동료 의원님들께도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

| 제4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관심이 깊어진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가?

‘소멸’에 관한 부분이다. 전국적으로 지방 소멸이 가속하는 시점에서, 세종시 내에서의 특정 지역 소멸도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해인 2022년 9월 15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첫 긴급현안질문도 바로 ‘관내 면 지역 자족 기능 강화’에 관한 것이었다. 신도심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했지만, 구도심, 읍면지역의 경우 계속 줄어들었다. 신도심만 세종이라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읍면지역까지 포함한 앞으로의 세종시 인구는 어떻게 될까?’하는 걱정이 앞섰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들은 정주하지 않는다. 좋은 공단이 들어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유치되면 직장이라는 정주 여건이 마련된다.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 기업에서 일하는 인구의 17%가 세종시 인구로 정주해 세종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면, 연쇄 반응으로 인해 내수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된다. 정원도시도 마찬가지다. 관광자원이 생기면 세종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정주하지 않더라도, 생활 인구가 증가한다. 정원도시를 보고 즐기기 위해 방문한 타시도 시민들은 세종의 도시 점포 매출을 상승시키고, 결국 소비시스템에 기여한다. 기업유치든, 정원도시든, 초기 투자에는 돈이 들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세금을 내거나, 공장을 관리하기 위해 관내 상점을 이용하거나, 박람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보장된다. 이 지속성 안에서 시의 존속이 보장되리라는 게 제 이론이다.

지금 세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를 얻을 만큼 교육환경도 좋고, 치안도 좋은 도시다. 하지만 일할 곳이 없으면 이 아이들이 자란 후 세종을 떠난다.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긴다. 세종의 기반에서 자란 세종의 아이들이 세종을 영위할 경제 인구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아주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짧은 시간 안에 실현되지 않을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하고 싶었는데, 이런 구조적 문제는 적어도 20년 정도의 기한을 잡고 바꿔나가야 할 분야다. 의원 임기 4년으로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에 매우 부족했다. 그 부분이 정말 아쉽다.

세종시는 지금 출범 13년, 사람으로 치면 이제 막 청소년기에 접어들었다. 성년이 되려면 적어도 20살은 넘어야 하지 않나.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정권의 변화로 인해 계획이 변하고, 로드맵이 중간중간 수정되는 문제가 지속된다. 당초 계획과 다른 부분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발전의 속도는 저하되고, 의견은 더욱더 다양화한다. 의견의 다양화가 이득이 될 때도 있지만, 도리어 일의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일을 허물거나, 사장해야 하는 결론에 이를 때도 있다. 행정의 양면성이라는 생각이 든다.

|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일화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소모적인 다툼이 잦았다. 협치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한 길로 나아갔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지역소멸과 지방분권 시대의 중심에서 세종이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본질적 고민을 다 같이 심도 있게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는 네 편과 내 편을 나누지 않고 세종시의회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세종을 일구었으면 한다.

| 제4대 의회, 먼 훗날 회고한다면 어떤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은지?

초선 4년은 기반을 닦는 시간이었다. 기틀을 마련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다. 전문가로서 능력을 겸비하는 기간이었다. 의정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던 제가 용어는 물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능숙하게 아는 전문가가 되었다. 직장으로 치면, 이제 일에 속도가 붙는 ‘대리’ 정도 달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만약 제5대 의회에 입성한다면 지난 제4대 의회라는 발로를 딛고 세종시 발전에 더욱더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멀리 내다보며 미래를 예측하고, 실천하는 의원이 되고 싶다.

| 남은 의정활동 기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그동안 시작했으나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일은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점검해서 보완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만약에 재선이 된다면 세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전략도 구상해 보려 한다. 이제까지 그래왔듯,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 갈무리에 돌입하고자 한다.

| 마지막으로 시민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은 시민 여러분께 달려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정당한 민원,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민원을 넣어주셨을 때, 그 민원이 협의를 거쳐 정책으로 실현되어 비로소 세종이 발전하고, 그 세종에서 살아가는 시민 여러분의 삶도 윤택해질 것이다. ‘우리 동네’에 국한하지 말고 ‘세종시’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바라봐주셨으면 한다.

시민분들의 귀한 선택으로 세종시의회에 입성해서 지난 4년간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마음과 결과가 와닿았길 바라며,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하고 싶다. 12월, 봄을 준비하는 계절이다. 저도 다가올 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채비 하겠다. 세종 시민 여러분들 모두도 따스하고 알찬 겨울 나시길 바란다.



제4대 의회, 도전과 성장의 시간

박란희 의원

누군가에게 중년의 미美라는 수식어를 쓰는 이유는 아직 꺼지지 않은 젊은 불씨 위에 노련함과 지혜로움이 쌓여가는 모습이 조화롭기 때문일 것이다. 2025년 겨울 끝 자리에 만난 박란희 의원의 인터뷰에서는 끊임없이 중년의 미美가 느껴졌다. 그의 나이로 비롯된 것이 아닌, 초선의 열정에 자리 잡은 4년간의 연륜이 자아낸 모습이었다. ‘공부하는 시의원’이라는 수식어를 얻을 만큼 시민을 위한 노력의 길에서 연구를 거듭해 온 박 의원은 이제 열정으로 점철된 비판보다 실효성 있는 제안에 힘을 기울이고 싶다고 전했다. 제4대 의회를 ‘도전과 성장’의 시간이었다고 돌아보는 박란희 의원. 앞으로도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할 그의 이야기를 열어본다.



| 이번 제4대 의회 의정활동도 막바지를 향해가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전한다면?

제4대 의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초선의원으로서 모든 것이 새로웠고, 그만큼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4년 가까이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세종시의 현황과 시민의 삶을 최일선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뜻깊다. ‘공부하는 시의원’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하며 문제의 원인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본적인 이해 없이 올바른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믿었기에, 늘 배우고 경청하는 자세를 잊지 않으려 했다.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열정이 앞서 옳다고 생각되면 밀어붙이던 시기도 있었다(웃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친 의욕이 때로는 결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비판보다 대안 제시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진했던 많은 일들이 제도적 한계와 예산의 제약 속에서 마무리되지 못해 아쉬움도 남지만,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 새로이 관심이 생긴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데?

특히 세종시의 역사적 유산에 관심이 커졌다. 세종시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공식 일정 틈틈이 직접 숨은 명소들을 찾아봤고, 이 과정에서 세종이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이 일었다. 앞으로는 세종의 문화적 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시민의 자긍심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정책에도 힘을 보태고자 한다.

또 「여성정치를 하다」라는 주제로 두 차례 세미나를 주관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여성 정치의 역사와 현실을 마주했다.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법적·제도적·문화적 한계를 극복하며 활동해 온 여성들의 삶을 접해보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있었던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전국 광역의원 중 여성 당선 비율은 19.8%에 그쳤다. 이 중에서도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은 14.7%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는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여성의 정치 참여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딥페이크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을 때,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간담회를 열어 관련 기관과 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경험도 기억에 남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성평등’의 관점이자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자질 있는 여성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을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꼈다.





|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일화가 있다면?

세종시의회 내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했던 시간을 첫 번째로 꼽고 싶다. 제겐 정말 값진 기억이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과제와 향후 추진 전략, 그리고 세종시 차원의 역할과 준비 사항을 폭넓게 논의하며 세종시의 비전을 내다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과 정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것에 일조했다는 뿐듯함도 남는다. 또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는 전동면과 전의면 사이에 위치한 ‘이성李城’의 발굴과 관련해 예산을 편성했던 일이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당시 전동면 산업단지 개발 대상 토지에서 유적이 발견되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다. 발굴 현장의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미래까지 보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다.

| 제4대 의회, 먼 훗날 회고한다면 어떤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은지?

제4대 의회는 제게 ‘도전과 성장의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 정책과 예산, 행정의 구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세종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었던 보람찬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남는다. 특히 중앙부처나 타 기관 등과의 협업과 확장성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때로는 소신만 믿고 뛰어가려 했던 모습도 떠오른다. 일을 추진할 때 ‘옳다’는 확신이 강했지만, 그 과정에서 함께 가는 방법을 더 배워야 했다는 생각도 듦다.

그럼에도 시민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진심으로 부딪히고 고민했던 시간이었다는 점은 자부한다. 먼 훗날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저에게도, 시민들께도 초선의원의 열정으로 빛어낸 따뜻한 기억들이 더 많이 남기를 바란다.

| 남은 의정활동 기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당선이 확정된 첫날 새벽, 잠도 이루지 못한 채 세종중앙청사 체육관으로 당선증을 받으려 갔던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때의 마음으로 남은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제4대 의회 의정활동 기간 중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마무리되었으면 한다.

이제는 의정 흐름에도 익숙해졌고, 시청과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조율도 한결 원활해졌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상대의 입장과 행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낀다. 남은 시간만큼은 무리하게 앞서가기보다, 서로의 속도를 맞추며 완성도를 높이고 싶다.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과제들을 차분히 점검하고,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일들은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 짧지만 소중한 이 시간을 시민들께 온전히 드리고자 한다. 제4대 의회 의원으로서 임기의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시민 곁을 지키며,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시간이 가장 의미 있고, 시민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가는 시간으로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

| 마지막으로 시민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세종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배움의 여정이었다. 때로는 부족함도 있었지만, 언제나 시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려 노력했다. 세종시는 여전히 성장 중인 도시이며, 시민의 참여로 완성되는 도시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시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 역시 시민과 발맞추어 세종의 미래를 견인하며,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통하며, 시와 정부를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세종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주시길 바란다.



정치, 복지의 사각지대를 비출 수 있어야 한다

유인호 의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세워진 블라드가 훼손된 모습 하나를 눈여겨 본 적이 있는가. 신호를 기다리며 시선을 두다 무심코 지나친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유인호 의원은 이 찌그러진 블라드 하나를 ‘혹자의 절대적인 삶’으로 봤다. 사소해 보이는 안전장치 하나가 사회적 약자에게는 죽느냐 사느냐를 관장하는 삶 전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학교를 벗어나서도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은 지속돼야 한다는 것. 유 의원은 정치가 들여다봐야 할 곳이 바로 이런 사회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전한다. 봉사하는 삶을 위해 세종시의회까지 다다른, 유인호 의원이 꿈꾸는 ‘안전한 사회’를 엿보았다.





| 이번 제4대 의회 의정활동도 막바지를 향해 가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전한다면?

일단 특정 분야에 특화된 의원으로 자리매김한 점은 뿐듯하다.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주민자치라는 영역에 관심을 두었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과 더불어 주민자치와 관련된 토론회 참여, 간담회 개최 등 정말 많은 활동을 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주민자치'하면 유인호 의원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는 자리 잡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단순히 한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냈다는 점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하게 된 출발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영역을 제4대 의회 활동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실현하려 부단히 애썼다는 점이 뚜렷하다고 할까. 사명감과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에 봉사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열망이 주민자치라는 구체적 결실로 사회 곳곳에 뿐리내리게 되어 뿐듯하다.

| 제4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새로이 관심이 생긴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가?

특히 관심이 깊어지게 된 분야는 학생들의 영역이다. 먼저 학생들의 영역에서는, 의외로 학생들에게 가져야 하는, 관심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흔히들 '학교 안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중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가져야 할 관심이 정말 부족하다.

일과 중에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학교를 떠나는 순간 청소년은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다. 학교가 아닌 곳에서 자행되는 무수히 많은 학교폭력, 그리고 도박, 혹은 마약으로부터의 유혹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청소년이 청소년이라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사회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하고, 그 보호는 장소와 시간을 막론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도시의 안전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약자들의 보행 안전을 책임지는 볼라드(충돌방지보호대) 기준이 충족되는 곳은 세종시 관내 21곳 중 단 2곳에 불과했다. 횡단보도 주변 점자를록은 32곳 전부가 부적정 또는 미설치였다. 또한 음향신호기 부적정 설치율은 46.9%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행정수도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미비한 사회 안전망이 눈에 띠었다.

우리는 세종이라는 도시에서 살아가며 스쳐 지나가는 많은 부분을 별것 아니라고 치부하며 사소한 지점이라고 생각

하곤 한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런 문제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부분 중 하나다. 정치는 바로 이런 영역을 개선하고 발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닐까. 연령, 성별, 신체적 차이 등을 막론하고, 사회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이다.

어떤 세상도 유토피아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향하는 바는 유토피아와 다를 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안전할 사회로 향하는 길 위에서 비로소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일화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경험은 바로 17개 시도 의회운영위원장들과 관계 맷을 기회가 있었다는 점이다. 초선의원으로서, 단충제 구조의 신생 도시에서 지방의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힘들고도 혼란스러웠다. 단충제라 해도 많은 업무가 주로 기초의 영역에 결부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 업무에 매몰되어 상대적으로 광역의 업무를 폭넓게 이해할 기회가 많이 부족했다. 그렇기에 운영위원장들과의 소통과 교류는 광역의원이 가지는 시선에 대해서 많이 배울 기회였다. 큰 그림을 그리고 흐름을 인지해 거시적 판단을 내리는 것. 다시 말해 ‘광역적 사고’를 배우고 세종시에 적용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 제4대 의회, 먼훗날 회고한다면 어떤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은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간’이다.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타인을 위해 나를 쏟은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열정의 원동력은 시민을 위한 삶을 그려내기 위함이었다. 그러다 보니 나를 위해 살던 때보다는 삶에 대한 무게가 더 무겁기도 했다.

시 집행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심의하며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론화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2023년 4월에 ‘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학술 세미나를 주도적으로 개최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제주연구원 등 5개 기관의 공동 주최였는데, 5개 기관이 가진 역량과 경험치를 한 번에 공유하고 그 바탕으로 지방분권의 미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 남은 의정활동 기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사실 종료를 1년 남긴 시점부터 마무리하는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해왔던 일들, 관심을 가져온 일들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기간에 접어들었다. 처음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했던 분야 모두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즉, 조례를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례가 사회에 잘 스며들어 쓰이고 있는지, 문제라고 말했던 부분은 개선이 되었는지, 제시한 해결책이 실효성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 조례 발의와 의견 제시, 문제점 지적이 끝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인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이다. 스스로 평가함과 함께 적용성과 변화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남은 기간 앞으로도 이 ‘스스로 평가하는 단계’를 이어 나가려 한다.

| 마지막으로 시민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민분들의 소중한 선택으로 뽑힌 의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투표를 위한 그 한 번의 발걸음이 가져온 발전을 몸소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아무리 자주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감사하다는 인사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다소 갑갑하고 진전이 없다고 느끼셨을 부분도 있을 텐데, 그건 의회를 비롯한 행정의 낙태함과 해이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꼭 전하고 싶다. 효과적인 결과와 철저함을 위한 절차를 거치다 보니, 행정의 속도가 시민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 세종시의회 의원들 모두 그 속에서 정말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성큼 다가온 겨울이 매섭다. 시민 여러분들 모두 언제나 평안하고 따뜻한 가정 안에서, 행복하시길 기원한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	29
행정복지위원회	30
산업건설위원회	32
교육안전위원회	34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36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37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38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안신일 위원



이현정 위원



홍나영 위원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 16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1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회피의무·업무추진비·갑질 행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 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조사 및 재발 방지 등의 절차를 규칙으로 구체화하고, 건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김영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오늘 심의한 안건 모두는 청렴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이라며,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사무처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 위원



여미전 위원



이순열 위원



홍나영 위원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행정복지위원회는 10월 22일 제10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12건 등 총 31건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 중 29건은 원안가결됐으며, 1건은 보류, 1건은 부결 처리됐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비소모품·소모품의 구분 기준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 및 띠어쓰기 등을 순화·정비하고자 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인 세종에서 시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홍나영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세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고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국제화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 등의 생활 편의 지원, 창업 상담, 장학금 지원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여, 생활체육 진흥 사업 전반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로 이관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간 기능과 목적을 보완하고자 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 및 평가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고, 공익 중심의 운영·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안전 관리 문제, 체육시설 이용자 등의 편의 증대 가능성 유무 및 집행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를 결정했고, 「조치원 문화정원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공공위탁 시 발생할 서비스 다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되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김광운 위원



김학서 위원



김현옥 위원



김효숙 위원



안신일 위원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 펼쳐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15일 지역 활성화 선진지를 견학하고 행정처분 사업장의 사후 조치현황을 점검했다.

김재형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시 환경정책과, 정원도시과와 동행하여 아산 신정호 현장을 시찰하였으며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농업용 저수지라는 점과 관리주체 등이 관내 고복저수지와 유사하다며 아산 신정호처럼 고복저수지가 지역 명소로 거듭날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한 최원석 부위원장은 “지방정원 등록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등록 전후 경제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전동면 솔티마을이 생산·납품하는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사안과 관련하여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자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납 기준 초과 사례로 관내 기업과 먹거리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저하된 만큼 사후 조치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강조하고, “현재 시행 중인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점을 개선하여 시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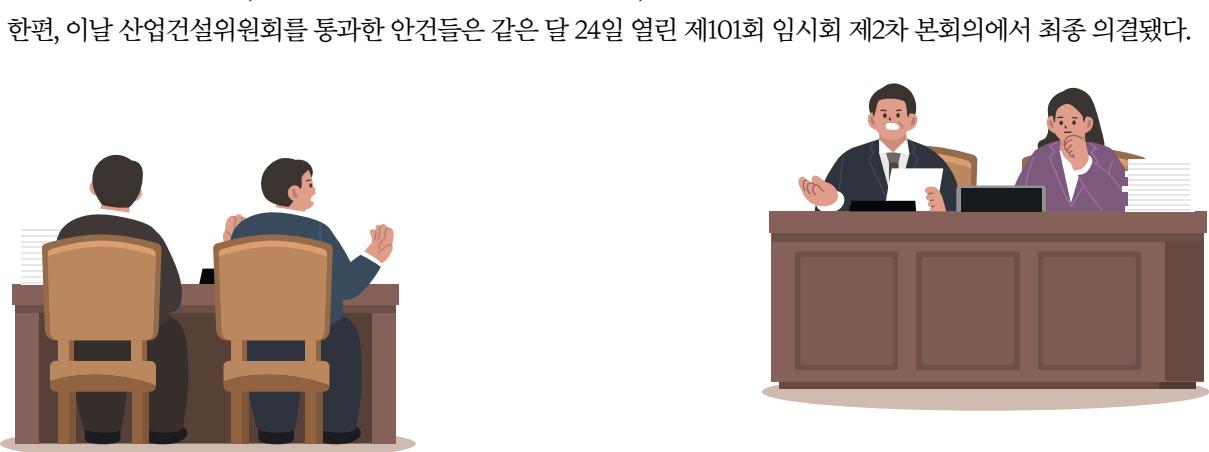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32건 심사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1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16건, 총 32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3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 등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각각 축산환경 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사고 위험과 관리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며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썼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 「세종특별자치시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 「세종특별자치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과 같은 조례안도 발의했다. 위 조례안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합리성, 고령 및 여성농업인의 영농부담 완화, 소규모주택 정비 시 주민 참여 확대 등을 도모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



김동빈 위원



박란희 위원



유인호 위원



제101회 임시회 기간 중 세종시 관내 교육시설 현장방문

교육안전위원회는 제101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15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가칭)과 안전체험교육원을 현장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시설 공사 막바지에 있는 학생 교육문화원의 개원 준비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체험형 안전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운영 중인 안전체험교육원의 교육 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2026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한 학생교육문화원은 옛 조치원중학교 부지(대지면적 18,566㎡, 연면적 8,299㎡)에 4층 규모로 조성 중이며, 현재 시설 공사 후반부로 접어들었다.

안전체험교육원은 2021년 11월 개원 이후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을 주제로 12개 체험관과 25개 체험장을 활용하여 대상별 맞춤형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학생교육문화원에 대해 청소년 전용 공간 운영, 학교 교육 연계 활동 강화, 장애인 편의 배려, 교통 및 기관의 접근성 확보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해당 문화원이 학생, 시민이 어우러지는 학생교육문화의 중심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의 성공적인 개원과 안전체험교육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교육 환경이 더욱 풍성해지고 안전교육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101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교육안전위원회는 10월 22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했다.

이번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안전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됐다.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이날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기준 재정공시 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 후 윤지성 위원장은 “이번 교육안전위원회 심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시민 안전 강화, 교육 재난 지원 현실화 등 세종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교육과 안전 분야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세종시청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 및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은 10월 24일 제1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안신일 부위원장



김동빈 위원



김영현 위원



김재형 위원



김충식 위원



김학서 위원



박란희 위원



여미전 위원



최원석 위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선수촌 건립 현장 방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10월 13일 합강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선수촌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공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선수촌 조성 시에는 집기류 설치와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세부적인 요소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대회 개최 시기를 감안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신일 부위원장은 “조직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화 기능이 충분히 반영된 선수촌이 만들어지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주변의 차량 흐름을 파악해 교통 접근성 또한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고, 박란희 위원은 “선수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대회 이후에는 시민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미전 위원은 “공사 현장별 진행 속도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전체 공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획된 일정 안에서 안전과 품질을 함께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최원석 위원은 “선수촌이 대회 이후에는 임대아파트로 공급될 예정이므로 장기적 사용을 도모해야 한다. 공사 품질 향상과 하자 예방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유인호 부위원장



김동빈 위원



김영현 위원



김현옥 위원



김효숙 위원



박란희 위원



윤지성 위원



이현정 위원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현장 점검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이하 인수특위)는 9월 24일, 10월 준공을 앞둔 4·2생활권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특위 위원 5명, 시민참여 특별점검반, 세종시 도시과, 감리·시공 관계자가 함께했으며, 인수특위는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주요 시설을 꼼꼼히 확인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복컴 건립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주로 2023년 4월 착공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대지면적 10,409㎡, 연면적 13,564.93㎡이며, 복컴과 더불어 119안전센터, 경찰지구대, 우체국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됐다.

김영현 위원은 “집현동 주민들은 행정 및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그동안 반곡동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며 “복컴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복컴에는 수영장, 도서관, 체육시설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이 포함돼 있다”며 “아직 준공 전인 만큼 하자 없이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특위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양질의 공공시설물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박란희 위원장



안신일 부위원장



김재형 위원



김충식 위원



김현미 위원



김효숙 위원



여미진 위원



유인호 위원



윤자성 위원



이순열 위원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행정수도 완성 특위)는 10월 1일 시의회 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과제와 향후 추진 전략, 그리고 세종시 차원의 역할과 준비 사항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국가상징 구역 관련 등 행정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세종시가 국가 행정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수도 완성 특위 위원들은 집행부로부터 현재까지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 또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추진 과제를 살펴봤다.

특히 회의에서는 현재 세종시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 주요 국가사업이 진행되면서 행정 기능의 공간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수요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박란희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은 향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추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현 의원

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행 2년차 이용패스,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정책으로 도약해야

김영현 의원은 시행 2년 차를 맞은 ‘이용패스’의 성과와 한계를 짚으며, 이제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정책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용패스는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은 무료로, 일반 시민은 월 2만 원의 정액권만 구매하면 최대 5만 원 한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출시 1년 만에 이용자가 3만 8천여 명으로 늘었고,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 건수도 1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성과에만 안주할 수는 없다”며 ▲생활밀착형 혜택 결합으로가입자 확대 ▲교통약자 지원 강화와 합리적 혜택 조정 ▲버스 운영 효율화 ▲북부권 교통망 불균형 신속 해소 등 4가지 개선 과제를 제언했다.

끝으로 김영현 의원은 “세종시는 이용패스를 재정 건전성과 교통복지, 지역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이 정책이 대중교통 중심도시 세종 실현의 주춧돌이 되도록 전력을 다해달라”며 발언을 마쳤다.



김효숙 의원

나성동, 더불어민주당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버스정류장 냉온열 의자 설치 사업의 면밀한 검토 촉구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버스정류장 냉온열 의자 설치 사업의 예산 효율성과 운영 실효성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폭염과 한파 속 편의를 위해 설치된 냉온열 의자로 인해 예산 집행과 실효성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냉온열 의자에 매년 유지관리비만 1억 원이 넘게 투입되지만, 고장이 잦아 적시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전체 정류장 1,436개 중 절반에 가까운 670개가 천장이 없는 기동형 정류장이라 비와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다”라며, “냉온열 의자보다 비가림형 정류장을 먼저 확충하고, 필요하다면 비교적 저렴하고 고장률이 낮은 온열 의자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며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효숙 의원은 “냉온열 의자의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유지관리의 효율화, 에너지 절약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신일 의원

장군면, 한솔동, 더불어민주당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세종시 첫 국가사적 탄생… 한솔동 백제고분군

안신일 의원은 한솔동 백제고분군 국가사적 지정의 의미와 후속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세종시 최초로 한솔동 백제고분군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됐다. 중앙정부 차원의 보존과 관리 지원이 강화될 것이며, 세종시 역시 이를 계기로 한솔동 고분군 일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솔동 백제고분군은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의사당, 중앙공원 등 세종시 핵심 거점과 인접해 있어, 역사성과 행정수도 비전이 어우러진 문화, 관광벨트 조성의 전략적 중심지”라며 “이와 연계한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첫마을 IC의 조속한 설치는 세종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주민과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는 첫 국가사적 지정을 발판으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문화적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의원

고운동, 더불어민주당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경계선 지능 학생 학폭 피해, 제도적 지원 강화가 시급

이현정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와 제도적 지원 강화의 시급성을 강하게 꾀렸다.

이날 이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은 법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학급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호 미비를 지적했다.

더불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학폭 신고 직후 7일 간 분리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학교장의 긴급조치나 학폭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해 피해 학생이 수개월간 가해 학생과 같은 교실에 머무르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의 지연 문제도 꼬집었다. 학폭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함에도 담당 인력이 부족해 피해 학생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실태를 비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현실에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내실 있는 운영체계 마련 ▲장애학생 등 학폭 조력인 제도 도입 ▲ 학폭 맞신고 피해자 보호지침 보완과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최원석 의원

도담동, 국민의힘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마트는 닫고, 불편은 열렸다. “시민만 피해 보는 규제”

최원석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이제는 지역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과 전통시장 동반 성장을 위한 혁신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평균 연령이 36.4세인 젊은 도시이며,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이 57.1%를 넘는 만큼 주말이나 휴일에 장을 보는 가정이 많다. 그 때문에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하거나 인근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출 감소로 인한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온라인 쇼핑의 수요 흡수로 시민들이 외출하는 빈도가 감소해 지역상권이 침체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 인식조사 실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정례화 ▲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홍나영 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인구 감소의 경고, 육아친화도시로 진화할 때

홍나영 의원은 “세종시는 젊은 도시의 상징이었지만, 최근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인구 감소의 경고를 염중히 받아들이고 육아친화도시로 진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의 출산율 감소를 “대규모 개발 위주의 정책에만 치중해 지역 정주 인프라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제주도의 ‘육아친화도시’ 정책을 사례로 들어 “임신과 출산 기반 확충, 공공돌봄 확대, 직장 내 유연근무제, 아버지의 육아 참여 확대 등 사회 전반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세종은 여성친화, 아동친화도시라는 강점을 살려 육아친화도시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이제는 정책 전환의 시점”이라며 ▲‘육아친화도시 세종’ 비전 선포 ▲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지원 강화 ▲공공·기업·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세종형 돌봄 협력 모델’ 구축 등을 제안했다.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연기대첩’ 활용한 애향심 및 지역 정체성 강화 제안

김충식 의원은 세종의 역사적 자산인 ‘연기대첩’을 애향심과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연기대첩이 『고려사』에도 기록된 한반도 7대 대첩 중 하나라고 설명하며, “이 전투는 단순한 승전이 아니라, 당시 연기 지역이 군사와 교통의 중심지로서 기능했다는 전략적 가치와 국가 방위의 상징을 입증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세종시 초등학교 부교재에서 연기대첩이 간략히 언급되고 있지만, 전투의 배경과 주요 인물, 지명 유래 등 세부적 내용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창고개, 원수산, 승적골 등 역사적 지명 또한 유래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지역의 정체성을 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종시 초등학교 지역 부교재에 연기대첩 관련 내용 확충 ▲연기대첩 관련 유적지 및 전승지 시 기념물 지정 추진, 안내판 설치로 역사체험 공간 조성 추진 ▲세종문화원,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연기대첩제’의 규모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충식 의원

조치원읍, 국민의힘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지역 산업 생태계 육성 반드시 고려해야”

박란희 의원은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의 운용 방향성을 바로잡고 ‘세종 시민을 위한 펀드’로서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우리 시는 400억 원 규모의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를 조성했으나, 지난 8월 제1호 투자 기업으로 대전에 본사를 둔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가 1년 이내 세종시 본사 이전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위반 시 벌칙 조항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지만, 펀드 운용 방향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약 300억 규모의 제2호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추가 계획이 발표된 상황에서 펀드 운용에 대하여 ▲지역 중심의 펀드 운용 방안 강구 ▲지역 기업 가점 제도 도입 ▲모(母)-자(子) 펀드 체계 도입 ▲펀드 운용 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등을 제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펀드 운용 사례를 교훈 삼아, 세종미래전략산업 펀드가 ‘세종시민을 위한 펀드’로서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란희 의원

다정동,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친환경종합타운 갈등 멈춰야… 주민 주도 복합시설 전환 시급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과 관련한 3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은 전동면 송성리에 당초 2025년 사용을 목표로 조성이 추진되었으나, 입지 선정 갈등과 주민소송 등 절차적 문제로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있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13년 125.7톤에서 2024년 320톤으로 2.5배가 넘게 증가했다”며, “기존 처리 시설의 포화로 인해 외부 위탁 처리 비용만 연간 1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행정력 낭비와 예산 부담, 도시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갈등의 악순환을 멈추고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상생 행정으로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주민 주도형 거버넌스 구축 및 투명성 확보 ▲최고 수준 기술 도입 및 주민편의시설 복합화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실질적 주민 특별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유인호 의원

보람동, 더불어민주당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세종시에 충청권 상생을 위한 전략적 지원 촉구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충청권 상생의 중심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출시를 통한 통합 관광권 조성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공동참가를 통한 수출 활성화 ▲‘충청권 초광역 UAM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협력 성과를 내며 초광역 협력체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성 자치단체들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충청광역연합의 본격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세 가지 방향으로 ▲충청광역연합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 ▲광역 단위 정책 추진에 세종시의 주도적 참여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실 중심 공교육 영어 혁신 촉구

윤지성 의원은 공교육 영어가 핵심 역량을 충분히 길러주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안에서 매일' 실천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교육과정상 초등 영어 수업이 주 2~3시간에 그쳐 실질적인 역량 형성이 어렵고, 이 때문에 사교육 의존과 지역 격차가 커진다고 진단했다.

이에 고비용 체험시설보다 '교실 중심' 개선을 제안하며 ▲놀이·역할극 등 방과후학교를 활동형으로 전면 개편 및 읍면 지역 우선 지원 확대 ▲ '오늘 10문장 말하기'로 실질적 교육목표 전환 및 교사 연수 확대 ▲아침·점심 '5분 영어 듣기 방송' 도입 ▲짧은 책·웹툰 기반 '영어 읽기 캘린지' 운영 ▲'영어 일기 쓰기-프레젠테이션' 정례화를 제시했다.

덧붙여 윤 의원은 방과후 강사 인력풀 구축, 말하기 중심 교원 연수 확대, 학교장 선택권과 학교 자율성을 뒷받침할 재정지원 등 즉시 시작할 수 있는 개선책을 실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지성 의원

연기·연동·연서면, 해밀동, 국민의힘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감사위원회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 촉구

이순열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독립성·전문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주관한 전국 시도 대상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징계 요구가 본청 고위 간부보다 읍면동·산하기관 하위직에 집중되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왜곡의 근본 원인으로 감사위원회가 시장 산하에 위치하는 구조라 독립성 보장이 어렵고 행정적 중심으로 인력이 구성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위원장 임명 방식 혁신과 예산 편성 자율권 보장을 통한 실질적 독립성 확보 ▲안전·데이터 등 분야별 전문팀 신설과 연간 감사목표 설정 ▲'처벌 중심'에서 '시스템 개선'으로의 전환 ▲결재·기획 체계에 따른 책임 배분 지표 도입 등 책임 행정 확립을 제안했다.

이순열 의원

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





김충식 의원

조치원읍, 국민의힘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세종시 특수성 반영 절실

김충식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단층제 자치단체로서 광역과 기초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세종시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중층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며, “이로인해 세종시는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는 수도권 기능을 분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계된 도시임에도, 현재의 교부세 산정 체계는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분을 별도로 반영하고, ▲「세종시법」개정을 통해 재정 특례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가 개선되고 재정 특례가 명문화되면, 세종시는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더 나은 교육, 복지, 교통, 문화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 강화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 실현과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도시다. 이제는 세종시의 행정적 특수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반영할 때”라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 공부하는 의회

01. '국회의사당시대 세종인재 참여 연구모임' 최종 보고회 개최	47
02. 공실 상가 활용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구체화	48
03. '세종시 친 여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49
04.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 연구모임 성료	50
05. '정주 외국인(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최종 간담회 개최	51





‘국회의사당시대 세종인재 참여 연구모임’ 최종 보고회 개최



효과적으로 함양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청년들은 전공을 살려 지역에서 일할 기회를 얻고, 관내 공공기관 역시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회에서는 ▲공공기관 직무와 지역 교육기관 전공 간 연계 분석 ▲직업계고 및 대학 졸업생의 진로 현황 파악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활용, 공공기관과 대학 간 협약을 통한 맞춤형 인재 양성 학과(계약학과) 설치, 특성화고 고용 촉진 조례 제정, RISE 사업 연계, 충청권 공동 인재 활용 등 다양한 실행 방안을 통해 지역 인재가 실제로 채용과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도 수렴했다.

안신일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의 목적은 세종시 인재들이 국회의사당 시대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연구 결과가 실제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2

공실 상가 활용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구체화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은 10월 2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상업용지의 과잉 공급 ▲행정타운 중심의 인구 불균형 ▲지구단위계획 내의 업종 제한 등이 세종시 상가 공실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됐다.

아울러 상가 공실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의 결과로 ▲나성동 디지털 콘텐츠 창업 특구 조성 ▲대평·어진동 문화예술 창업 특구 조성 ▲세종형 캡슐호텔 시설 조성 등이 최종보고서에 구체적 실행 계획과 함께 담겼다.

나아가 나성동에 ‘세종형 신기술 창업기업’을 유치하고, 대평동과 어진동 일대를 소규모 문화 콘텐츠 창업 모델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안도 논의됐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형 캡슐호텔 조성안”은 세종시의 부족한 숙박시설 수요를 해소하고 나아가 상가 공실까지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진동과 대평동이 문화예술 창업 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과 어우러져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실행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효숙 대표의원은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방안들은 상가 공실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 예산 반영 등의 방법으로 구체화할 것”이라며 “정책이 구상이 아닌 실행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 하는 것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03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은 11월 5일 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제6차 간담회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원석 대표의원과 김영현, 김현미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들, 그리고 세종시청 대중교통과, 도로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오시몬 교수)으로부터 ‘세종시 정류장 보행환경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청취하고 세종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과 제도적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류장 구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사고 위험을 분석하고 ▲정류장과 횡단보도 간 안전거리 확보 ▲정지선 이중 표시 도입을 통한 차량 인지 강화 ▲보행로·차도·PM 구역의 색상 포장 구분 ▲BRT 접근 감응형 신호체계 구축 등 구체적 시설개선 및 교통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최원석 대표의원은 “연구모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세종시 BRT는 정시성과 효율성 면에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지만, 이용량 증가에 따라 보행자 사고도 함께 늘고 있는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한 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연구모임의 연구 성과는 향후 세종시 보행안전정책 및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될 전망이다.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 연구모임 성료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이 10월 29일 제5차 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청소년 지원 인프라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에서는 세종시의 청소년 정책 입안, 예산 배정, 사업부서 운영, 관련 시설 현황 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자료가 공유되었다.

아울러 보고서 발표 이후에는 ▲법제 기반 청소년 참여, 권리 보장제도 강화 ▲청소년 중심의 공간 기능 다변화 ▲청소년 참여 동기 활성화 ▲청소년 정책 접근성 강화 ▲청소년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확장 ▲지역 형평성 확보 등 향후 세종시 청소년 선진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전략 등이 언급됐다.

이순열 대표의원은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젊은 도시다. ‘아이들’이라는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기에 청소년 선진 정책 실현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 청소년을 위한 ‘선진 정책 마련의 의무’가 있다 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모임 회원 모두는 마지막 간담회가 청소년 선진 정책 수립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연구 결과에 기반해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께 마음을 모았다”며 의지를 전했다.

한편, 제5차 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 연구모임은 약 7개월 동안 수렴된 방안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청소년 선진 정책의 수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주 외국인(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최종 간담회 개최



‘정주 외국인(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10월 3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홍나영 대표의원과 김현옥, 김동빈, 김학서 의원, 이미경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부회장, 전세경 공주교육대 교수, 하미용 세종시가족센터장, 김영길 한국과학기술원 실장 등 연구모임 회원을 비롯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연구진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착수한 연구모임의 ‘세종시 정주 외국인 정책 수립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보고됐다. 참석자들은 연구 내용을 토대로 세종시 실정에 맞는 정주 외국인 지원 정책 방향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의견을 정리했다.

홍나영 대표의원은 “세종시 내 인구 정체와 감소라는 현실 속에서 다문화 정책까지 세심하게 고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단발성 교육이나 행사에 그치지 않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언어 지원, 식생활 개선 등 정주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지난 2월 발족 이후 총 5차례의 간담회와 1회의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활동 기간 동안 ▲세종시 정주 외국인 현황 분석 ▲타 지자체 우수 사례 조사 ▲관계 전문가 및 외국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과 다문화 공존을 위한 세종시만의 실질적 정책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종시 외국인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첫 사례로, 향후 정책 방향 설정과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국적 모범사례로 우뚝…

전국 최초 조례, 아파트 도시의 안전 패러다임 전환 성과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쾌거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로 지난 11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심사에서 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세종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해당 조례는 이날 대회에서 아파트 밀집 도시의 구조적 위험에 대비하고, 그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 입법으로 평가 받으며 전국적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조례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세종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화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입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하주차장과 같은 고위험 구역 관리 강화,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관리 등 상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사례로 인정받은 것이다.



조례 제정 이후 추진된 후속 정책도 수상 배경이 됐다. 세종소방본부가 운영 중인 금화순찰대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전수 점검해 위험 요인을 모두 시정했다. 아파트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98%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시민 체감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점도 수상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본심사 발표를 맡은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은 “아파트 도시라는 세종에서 화재예방 입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오늘로써 이번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 안전정책이라는 점이 입증됐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입법의 역할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안전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의회 대표 행사로, 지역 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의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가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전심사를 통과한 12개 지방의회의 사례가 본선에서 경쟁했으며, 최종 순위는 사전심사(60%)와 본심사 발표평가(40%)를 합산해 결정됐다. 본선 진출 지방의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부상품이 수여됐다.

얼어붙은 겨울에도 세종시 청소년은 민주 시민으로 쑥쑥!

2025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마무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월 25일, 여울초등학교 학생이 참여한 본회의 방청을 끝으로 ‘2025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마무리했다.

세종시의회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배울 수 있는 ‘민주주의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일일 시의원이 되어 직접 본회의를 체험하는 ‘모의의회’와 시의원이 직접 학교로 방문하는 ‘찾아가는 의회교실’,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실 등 의회 내부를 견학하며 현장 지방자치를 경험하는 ‘의회 견학’,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본회의 방청’ 등 총 4가지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구성, 운영했다.





아울러 올해는 지난 5월 보람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바른초, 한결초, 전동초, 해밀중, 새롬고 등 15개 학교 58학급 1,317명을 대상으로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세부적으로 ‘모의의회’ 5회(참여 학생 96명), ‘찾아가는 의회교실’ 10회(참여 학생 773명), ‘의회견학’ 7회(참여 학생 238명), ‘본회의 방청’ 9회(참여 학생 210명)를 추진하며 총 31회차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힘썼다.

특히 지역구 의원이 직접 학교에 방문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의회교실’ 운영 비중을 전년 대비 3회 증가한 10회로 늘렸다. 학생들의 이동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더욱 많은 학생이 쉽게 프로그램을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한 것이다.

학생들에게 지방의회를 접한 경험이 한시적 체험을 넘어 ‘지속적인 학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소감문 공모전도 마련했다. 세종시의회는 다가오는 12월 중으로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작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2025년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나갈 주역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절차와 의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홍보를 강화하고 방식 또한 다각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가오는 2026년, 올해보다 더 다양한 학교에서 의회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는 지방의회 체험이라는 효과와 더불어 흥미와 실효성까지 확보하기 위해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2026년에는 더 다채로워진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구성할 전망이다.

• 세종에서 놀자, 수자 •

설렘 가득한 겨울,
흰 눈의 낭만과 화려한 트리가 새종을 수놓고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 덕에 서로의 온기를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계절,
연말 분위기 물씬 풍기는 새종시 겨울 행사 정보를 만나봅시다.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
<크리스마스 콘서트>**



무엇을?

2025년의 끝자락, 올해의 선물 상자 안에 들어 있는 크리스마스를 담은 음악, 그 선물을 풀어봅니다.

언제?

2025년 12월 24일, 19:30

어디서?

세종예술의전당

가격은?

R석 20,000원
S석 10,000원

상세정보는?



리처드 용재 오닐& 제레미 덴크 듀오 리사이틀



무엇을?

리처드 용재 오닐과 제레미 덴크가 선보이는 비올라와 피아노의 환상적 하모니! 바흐·베토벤·베를리오즈까지 아우르는 드라마틱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언제?

2025년 12월 27일, 17:00

어디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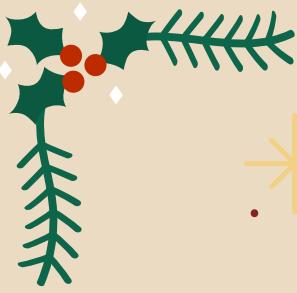
세종문화예술회관

가격은?

R석 60,000원
S석 40,000원

상세정보는?





2025 세종예술의전당 송년음악회 〈KBS교향악단&정명훈의 합창 교향곡〉



무엇을?

세종시의 송년을 따스하게 수놓을 KBS 교향악단과 정명훈의 합창 교향곡!

언제?

2025년 12월 28일, 18:00

어디서?

세종예술의전당

가격은?

R석 120,000원
S석 80,000원 / A석 50,000원
시야제한석 30,000원

상세정보는?



2025 세종예술의전당 송년콘서트 〈1230, CONCERT Night〉



무엇을?

한 해의 끝, 음악이 마음을 감싸는 시간. 가장 뜨거운 목소리와 가장 진한 감정으로 어우러지는 단 하나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언제?

2025년 12월 30일, 19:30

어디서?

세종예술의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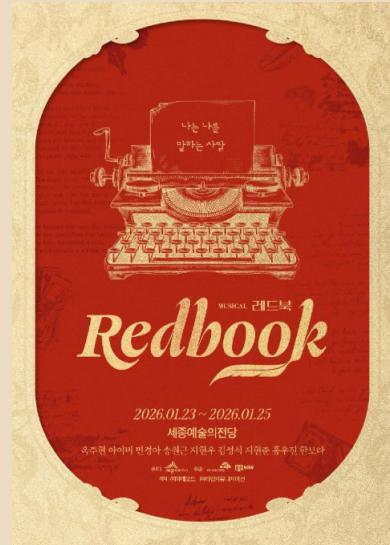
가격은?

R석 50,000원
S석 40,000원
시야제한석 20,000원

상세정보는?



뮤지컬 〈레드북〉



무엇을?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19세기 런던, 시대의 편견을 넘어 서로를 통해 '제1의 나'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언제?

2026년 1월 23일~25일, 23일 19:30 /
24일 14:00, 18:30 / 25일 14:00

어디서?

세종예술의전당

가격은?

VIP석 130,000원
R석 110,000원
S석 90,000원

상세정보는?



2025.10.27.

예산심사 실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월 27일 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예산심의 실전기법'을 주제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의원,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재정분석과 예산심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실무 중심 교육이다.

강의는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 강혜석 교수가 맡았으며, ▲예산서 분석 ▲심의 보고서 작성 ▲질의·답변 기술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9월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심의 교육 수요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수요 조사에서는 '예산심의 보고서 작성법'과 '예산서 주요 항목 분석 방법' 등이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한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의회 구성원의 전문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31.

'세종시 이해 교육' 및 현장방문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월 31일 신규 임용 및 전입 직원 18명을 대상으로 '세종시의 역사와 가치, 정체성을 되새겨보는 교육 및 현장 탐방'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직원들은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의 특강을 통해 세종시의 탄생 배경, 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경청하며 세종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공유했다.

이어 직원들은 조치원문화정원, 연동문화발전소, 마을기록문화관을 방문하여 기록물을 통해 지역의 역사를 만나는 시간도 가졌다. 또 도시재생시설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경과와 시설 운영 현황을 듣고, 지역문화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돌아봤다.

교육에 참여한 세종시의회 신규 직원은 "이번 강의와 현장 방문을 통해 세종시의 역사와 비전을 이해하며 지역과 더 친근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의회 모든 구성원이 세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에 임해 성숙해진 의정 기반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11.19.

세종시의회,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방문 맞아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월 19일 벤치마킹을 위해 세종시의회를 찾은 이천시의회 방문단을 맞이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방문단을 대상으로 의정모니터단의 선발부터 분과 운영 체계, 의견 제출 및 심사 방식, 동아리 활동, 지정·특정 과제 운영 등 세부적인 실무 시스템을 소개했다.

특히 제4기 의정모니터단은 시민 의견 제출이 활발해지고 의견의 전문성 등 질적 수준도 향상되어 2024년 지방의회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천시의회 방문단은 세종시의회의 '피드백 기반 의견 순환 처리 구조',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 체계', '분과 중심 모니터활동' 등 정교한 시민참여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은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직접 반영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온 제도"라며, "세종의 경험과 비결을 아낌없이 공유해, 이천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의정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11.28.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도 제7차 임시회 참석



임채성 의장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의 주요 현안과 입법·정책과제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 ▲국가 장학금 성적제한제도 개편 촉구 건의안 ▲전국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건의안 등 지역 불균형 해소와 청년 지원, 대중교통 재정 안정성을 다루는 주요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공연자 안전 확보를 위한 「공연법」개정 건의안,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 건의안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전국 단위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검토했다.

임채성 의장은 회의 석상에서 "전국 시도의회가 직면한 제도적, 정책적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세종시의회도 타 시도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입법정보

I. 생활법령	61
II. 주요입법동향	67
III. 법령해석사례	71
IV. 최근시행법령	73
V. 타 지자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75



I. 생활법령

사례 01

상속인들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의 유언 모습을 직접 촬영했으나 그 유언이 형식상 무효인 경우,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솔로몬의 재판)

나부자 씨는 사망하기 전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에는 나부자 씨가 미리 작성한 유언증서를 노트북 화면을 통해 보면서, “자녀 나차남에게는 토지와 건물 지분 절반을, 자녀 나장 남에게는 나머지 절반의 지분을,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각각 2,000만 원씩 주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차남 씨는 이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파일도 소지하고 있었는데, 당시 나부자 씨는 촬영 도중 “그럼 됐나?”라고 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이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을 잃게 되면서 나부자 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치게 됐는데요. 이후 나차남 씨는 아버지와의 사이에 사인증여 계약을 체결했다며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중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①나차남 씨: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소유 부동산의 절반을 제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상속인들 중 유일하게 그 모습을 그 자리에서 직접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유언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건 서로의 의사가 합치된 사인증여 계약에 해당해요. 따라서 계약의 내용대로 부동산 절반에 대한 소유권은 제게 있습니다!

②다른 상속인들:

촬영된 영상의 형식과 내용은 청약과 승낙에 따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사인증여가 아니라 유언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유언하는 자리에 동석해서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증여가 인정된다면 자녀들 모두에게 재산을 배분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형평에도 맞지 않아요!

평결

정답은 2번.

“다른 상속인들: 촬영된 영상의 형식과 내용은 청약과 승낙에 따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사인증여가 아니라 유언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유언하는 자리에 동석해서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증여가 인정된다면 자녀들 모두에게 재산을 배분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형평에도 맞지 않아요!”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상속인들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이 유언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하였으나 그 유언이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 (1)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등 참조).
- (2) 망인이 노트북 화면을 통해 읽고 있는 내용은 ‘유언증서, 유언자 망인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유언집행자의 지정과 더불어 ‘유언자 망인’으로 끝맺는 내용이어서 그 형식과 내용상 ‘유언’임이 명백하다.
- (3) 망인이 단독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언자인 망인이 자신의 상속인인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다고 보아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 (4) 망인이 유언 내용을 읽다가 “그럼 됐나?”라고 말한 것은 자문하였을 뿐이어서 원고에게 물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와 사이에서만 유독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망인이 유언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다른 자녀들과 무관하게 원고에 대해서만은 자신의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평결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안에서 촬영된 영상의 내용만으로는 나부자 씨와 나차남 씨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따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나차남 씨에 대해서만 사인증여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자녀들에게 재산을 배분하고자 하는 나부자 씨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나차남 씨에게만 유리해지는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나부자 씨와 나차남 씨 사이에 사인증여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평결일 : 2025년 9월 16일

참조판례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생활법령

사례 02

이혼을 한 후에도 과거에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를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솔로몬의 재판)

B의 끈질긴 구애 끝에 A는 B와 혼인신고를 한 후에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A는 지인을 통해 B가 이미 오래전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자녀를 3명이나 두고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에 빠졌고, B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본인이 속아서 결혼하게 됐다는 사실에 분노한 A는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는데...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① 김 변호사: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됩니다. A와 B 사이에 이미 이혼 신고가 이루어졌고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하더라도, A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혼인 무효는 불가능하다는게 제 견해입니다.

② 최 변호사:

혼인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혼인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게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수단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평결

정답은 2번.

“최 변호사: 혼인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혼인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게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수단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봅니다”입니다.

위 사례는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다. 그러나 신분 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혼인금지 규정(민법 제809조 제2항)이나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형법 제328조 제1항 등)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되었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므로 이혼 이후에도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한다.
- (2) 가사소송법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가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이혼한 이후 제기되는 혼인무효 확인의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 (3) 대법원은 협의파양으로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입양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 (4)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가 단순한 불명예이거나 간접적·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기재의 정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재 내용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평결

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A는 B와의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5년 11월 1일

참조판례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I. 주요입법동향

| 01. 최근공포법령

정부조직법

(공포 '25. 10. 1. / 법률 제21065호)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신사법

(공포 '25. 10. 28. / 법률 제21070호)

현행법은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왔음.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문신 등을 시술받으려는 이유가 의료목적이 아니라 주로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이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님에 따라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공포 '25. 10. 31. / 대통령령 제35835호)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킬로그램당 247.5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II. 주요입법동향

| 02.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주요법안)

신임자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재직 근로자 중 1명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음.
- 그런데,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회)

-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는 그 근거 규정이 없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 법에 규정된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신설).



II. 주요입법동향

| 03. 최근 국회 접수 법안(주요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등 15인)

- 최근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등 잇따른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으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을 검토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조인, 의료인, 아동복지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조사·분석을 의무화하고자 함.
- 한편 아동학대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TF팀이 시범 운영된 바 있으며, 과거 대구, 포천, 울주 등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인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을 위한 자료 취득과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관계기관에 자료협조를 거절 받은 사례가 다수 발생해 사실상 심층적인 사례분석이 불가한 상황임.
- 이에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분석을 위해 자료요청 및 열람 권한 등 사례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신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건태 의원 등 11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과정 및 결과를 알 수 없어 투명성과 책임성 결여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5항 신설).



II. 주요입법동향

| 04. 최근입법예고(주요법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0인)

(의견제출 '25. 11. 16.까지)

-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 그러나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 시점과 혜택을 받는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친생자녀 뿐만 아니라 입양자녀에 대하여도 적용되어 단순히 출산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양육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제도의 명칭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서 출산한 때로 앞당기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을 기여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등 11인)

(의견제출 '25. 11. 16.까지)

-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2009년 소득공제 150만원이 설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도록 변동이 없었음. 그 사이에 명목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소득 세수는 5배가 늘어나는 등 사실상 근로소득 증세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 이를 바로잡고 자 소득공제액을 17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 지난 15년간 물가가 40%가 상승하였으나, 현행 소득세법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명목 소득만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그 부당함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



III. 법령해석사례

사례 01

질의(법제처-25-0698 / 회신일자 '25. 11. 06.)

※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질의요지

- 「해외이주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함)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함)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외이주법」 제4조에서는 해외이주의 종류는 같은 조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연고이주(제1호),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등 무연고이주(제2호) 및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를 현지이주(제3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 태국에서 은퇴비자(각주: 이 사안에서는 영주권을 얻을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함)로 거주 중인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회답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은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 먼저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서는 현지이주의 대상을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주권이란 특정 국가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인 유학이나 파견, 출장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각주: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462 결정례 참조).



III. 법령해석사례

-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은 영주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장기체류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인 문언에 충실한 해석으로,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도 해외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영주권과 준하는 수준의 장기적인 체류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안에서 태국 은퇴비자는 ① 태국 이민청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만 50세 이상 외국인에게 태국에서 1년의 체류를 인정하는 제도로, ② 이러한 경우에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별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은퇴비자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매년 일정 요건을 갖추어 다시 은퇴비자를 허가받아야 한다는 점(각주: 「1979 태국 이민법」 제34조, 제35조, 제41조 및 제43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태국에서 영구적으로 또는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是很困难的. 어려우므로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해외이주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①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③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3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에는 생활의 근거를 완전히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외이주신고 대상인 ‘현지이주를 한 사람’의 범위에는 이 사안과 같이 태국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은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은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사례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 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헌법」 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V. 최근시행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5. 11. 8. 시행)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영업 및 동물생산 과정에서의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를 추가하고, 동물 관련 영업장 내의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생산업의 사육실·분만실·격리실 및 동물전시업의 전시실·휴식실 등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장소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 (대통령령 제35570호, 2025. 6.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동물생산업자가 그 영업장에서 기르는 등록대상동물은 조례로 정하는 동물등록 제외지역에서도 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허가영업이나 등록영업 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의 공통 기준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를 추가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25. 10. 9. 시행)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표준화협의회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함을 명시하는 등 전문용어의 적극적인 표준화를 통해 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정부와 국민 간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5. 10. 23. 시행)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 등의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IV. 최근시행법령

방송법

(일부개정, '25. 10. 23. 시행)

한국방송공사의 지정으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를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25. 10. 28. 시행)

최근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등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초대형산불로 피해지역 주민의 삶과 생업의 터전 및 기반이 모조리 파괴됨으로써 경영활동의 재개를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 산불피해가 주거지 및 생산시설로 확산되면 그 재난의 특성상 회복할 수 없는 불가역적 파괴가 수반됨. 따라서 초대형산불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주민은 자력으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어 삶의 회복과 일상의 복귀는 요원할 것임. 이에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기존 법률에 따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완전하고 충분한 수준의 보상에 이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5. 11. 1. 시행)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고자 함. 담배의 제조자 등이 2년마다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결과서 등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검사결과서 등을 송부하도록 함.



V. 타 지자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고령군 화재 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25. 10. 30.)

제안이유

고령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 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주요내용

- 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제4조)
- 나. 임시거처 지원에 관한 사항(제6조)
- 다. 심리 회복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제7조~제8조)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시행 '25. 11. 6.)

제안이유

시민들에게 헌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회헌혈자를 우대함으로써 헌혈활동을 권장하고, 헌혈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헌혈추진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제2조)
- 나. 헌혈지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제6조)
- 다. 헌혈추진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제7조)



V. 타 지자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시행 '25. 11. 7.)

제안이유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제4조)
- 나. 임시거처 지원에 관한 사항(제6조)
- 다. 심리 회복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제7조~제8조)

영양군 청년·중장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시행 '25. 11. 7.)

제안이유

이 조례는 영양군 청년·중장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청년·중장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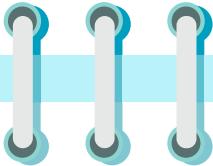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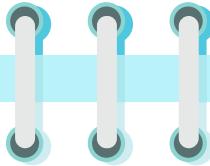
주요내용

- 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제3조)
- 나.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제5조)
- 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제11조~제12조)

세종시의회 2026년 상반기 회기 일정 안내

1월							2월							3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신령	2	3	1	2	3	4	5	6	7	1 설 설날	2	3	4	5	6	7
4	5	6	7	8	9	10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1	12	13	14	15	16	17	22	23	24	25	26	27	28	22	23	24	25	26	27	28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9	30	31				
○ 제103회 임시회 : 1.28.(수) ~ 2.6.(금) -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조례안 등							○ 설 연휴 : 2.16.~2.18.(3일)							○ 제104회 임시회 : 3.11.(수) ~ 3.25.(수) - 시정질문, 조례안,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등						
4월							5월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1	2			1	2	3	4	5	6	
5	6	7	8	9	10	11	3	4	5 어린이날	6	7	8	9	7	8	9	10	11	12	13
12	13	14	15	16	17	18	10	11	12	13	14	15	16	14	15	16	17	18	19	20
19	20	21	22	23	24	25	24*	25	26	27	28	29	30	21	22	23	24	25	26	27
26	27	28	29	30			31 대체연							28	29	30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 4월(예정)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 : 4.4.~4.23.							* 부처님 오신날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6.3.(수)						

■ 본회의 예정일 ■ 위원회 예정일
※ 기본일정은 의정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 미디어 채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온라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가 생중계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각종 홍보영상 또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는 간편하고 빠르게 세종시의회 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누리집

<https://council.sejong.g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ouncilsej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세종특별자치시의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jongcitycouncil>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ejongsocial>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시민 필자 모집 안내

계간 에서는 역량이 뛰어난 시민 필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 포토에세이, 수필 등 어떤 형식이든 가능합니다. 시의회 방청이나 방문, 의정활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실 분, 세종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흥미롭게 서술해 주실 분, 가장 일상적인 시선으로 우리 동네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내 주실 분 등 숨은 작가님들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 ✓ 이메일 제출 시 한글 혹은 워드 파일로 작성 바랍니다.
- ✓ 포토에세이 제출 시 사진 원본(5MB 이상 고화질, 스마트폰 촬영 지양) 파일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 선정된 분들께는 별도로 회신해 드립니다.
-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포토에세이 시 5매 내외)입니다.
- ✓ 적합한 원고가 없을 시 미선정되어 게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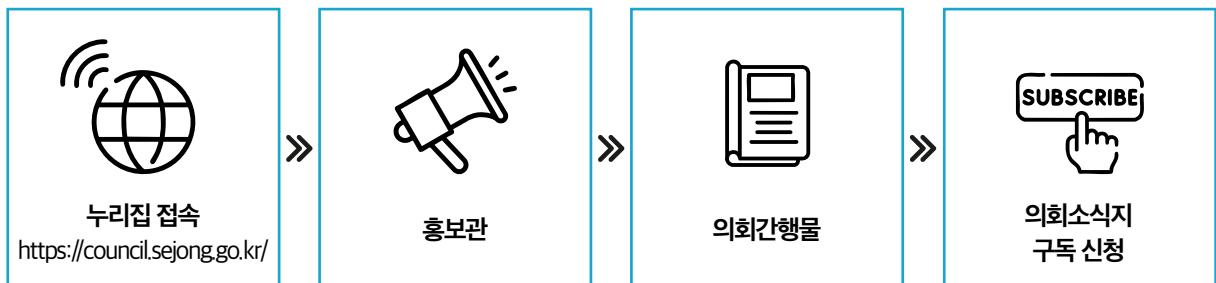
보내실 곳

우편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층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소식지 담당자 앞
전화 | 044.300.7248 팩스 | 044.300.7219 이메일 | yjk78901@korea.kr



소식지 구독 신청

세종시의회는 누리집을 통해 소식지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는 시민께서는 아래 경로로 구독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